

동시다발 교통망 확충 동해안 관광지도 바뀐다

뉴스 & 기획

동해안은 요즘 '공사중'이다.

동해안에 고속철도 시대를 열면서 서울~강릉 접근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시키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를 비롯해 연내 개통 예정인 동해고속도로 연장(동해~삼척, 양양~속초) 공사, 내년 완공되는 양양~동홍천 동서고속도로 공사, 삼척~포항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공사 등 SOC확충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 숙박 수요 등을 겨냥한 대규모 숙박·휴양 리조트 건설 사업도 전례없이 붐몰을 이루고 있다.

관광 전문가들은 "관광객 유입을 촉진시키는 '관광 자국'이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해안 관광의 새판을 예고하는 변화의 물결"이라며 "여름 한철장사와 영세성이라는 만성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동해안 관광에 기회적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표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얼마전 부산지역 관광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부산 관광객의 40%가 KTX 고속열차 이용객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서울 심장부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1시간 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관광객 유인에 엄청난 자극이면서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동해안 숙박·리조트에 관광객으로 호황을 누리고 파급효과가 지역 사회와 관광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의 새판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까지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개통하기 위해 강릉시내 구정면과 강남동 구간에서 철도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강릉구정면

■ 도내 교통망 확충공사



동계올림픽 앞두고 도내 곳곳 SOC 확충공사 관광객 유입 촉진 기대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과제부담 또한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요즘 제주도가 중국인 지, 한국인지 헷갈린다는 느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너무 많은 재료를 넣으면 비뻔함이 맛이 없어지듯이 동해안은 관광콘텐츠를 차별화시키되 커피, 한옥, 눈, 바다 등 지역적으로 독특한 테마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인선 강릉원주대 교수는 "타지역

의 선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속열차가 운행하면 관광객 체류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숙박 체류객을 늘리기 위해 빙상경기장 등 올림픽유산 시설을 활용해 국제대회를 지속 유지하고 경포 빛꽃축제 처럼 관광객 유인효과가 높은 계절형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특수 등의 붐을 타고 형성된 관광투자자와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휴양 인구 유인을 늘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석중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건설 붐에 편승해 땅만 확보해놓고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이나 계약단계에서 몇년 이내에 개발투자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는 등의 강제조항을 만드는 등 계약사항을 보다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고 이제 고속열차 운행이나 고령화 사회 심화 등으로 인해 중증에는 대도시에서, 주말은 동해안에서 보내는 '새컨하우스' 개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평수는 1가구2주택 제한을 완화해 주는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2·3면

강릉/최동열 dychoi@kado.net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확대 반대”

건설단체 한목소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건설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협회는 최근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3만8000여개 회원사 이름으로 최근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체불 근절 위해 도입 필요” 건설단체들이 일제히 국토부에 탄원서와 공문을 통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공공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적용 확대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기관-원도급자-하도급자-2차 협력자(건설근로자-자재·장비업자)로 이어지는 하도급 전 과정에 걸쳐 대금 관리 등을 전자화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바라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7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등 20개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16조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 중 90% 이상을 하도급지킴이 등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해 발주할 예정이다. (본지 4월26일자 1면 참조)

국토부도 올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14조원 규모를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적용

공정위 이어 국토부 적용 방침 건설·전문·설비협회 잇따라 철회 촉구 공문·탄원서 제출

다양한 지급구조 등 고려 없이 체불방지에 초점...부작용 우려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에 인출제한 제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인출제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자신의 공사대금 이외의 자금에는 손댈 수 없다.

기존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건설행위 상 지정된 시일 내에 각각 하도급자와 2차협력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자금유동성 여유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인출제한 시스템 적용은 필

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분의 대금 이외에는 원천적으로 손대지 못하게 만들면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업계 “인출제한 도입은 탁상행정” 건설단체들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로 △건설사 유동성 제약 △중복 규제 △체불방지 제도 등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제도로 보완 가능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건설사 유동성 제약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의 인출제한 제도 적용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기업활동에 큰 위축을 부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인출제한은 기업의 자금유동을 떨어뜨려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영업·투자 등 기업활동력을 떨어뜨린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등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기존 장치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인출제한이

포함된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선투입 공사비, 자재 등 여러 현장 선구매, 건설기계장비업자와 장기계약 등 다양한 임금·자재·장비대금지급구조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체불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는 자재·장비대금을 특정계좌로 관리하고 인출을 제한해 건설한 건설사의 유동성 자금 부족을 부른다. 또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대리점 등에서 선구매하는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정관리비효율을 불러 행정 부담을 늘린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체불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건설사들이 체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 때문에 이렇듯 규제를 적용받아 불편을 겪는 것은 억울하다. 체불 경력이 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

Q **Q** 판공공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약정에 따라 탈퇴한 경우, 잔존 구성원은 탈퇴 전의 시공분에 관하여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만을 취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A**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게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A회사만이 공사를 수행하다 B회사가 탈퇴하였는데, B회사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압류를 하여 발주자가 기성금 전액을 공탁한 경우 A회사는 실제 시공비율에 따라 전액에 대한 권

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하여 공탁된 기성금의 50%에 대하여만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 잔존 구성원은 위와 같은 법적 분쟁 및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퇴하는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절차를 병행하는 등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총 1.1兆-16건 ‘주인찾기’ 속도... 수주전도 본격 점화

올 공공시장 첫번째 분수령 물량확보 경쟁 치열할 듯

이달 말부터 총 1조1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방식의 대형공사 입찰시장이 문을 연다.

건설업계에는 올 공공부문 수주농사를 좌우할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치열한 수주전도 본격 점화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을 비롯한 한국도 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중심제 방식의 대형공사 16건에 대한 입찰(가격개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중심제로 집행(낙찰자 선정)을 완료한 공사는 단 2건(조달청)을, 올해 새로 도입된 중심제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셈이다.

발주(집행)기관별로 보면, 우선 조달청은

오는 31일부터 추정가격 기준 총 8067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공사 12건의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중평제) 대상이나 유예기간을 통해 중심제로 발주된 7건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발주에 나선 LH도 이달 말부터 3037억원 규모의 대형공사 3건을 집행할 계획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39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로 첫 번째 중심제 집행에 나선다.

이상 대형공사 16건의 총 추정가격(설계금액)은 1조1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업계는 이들 공사 입찰이 올해 공공시장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수주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몇몇 기술형입찰공사가 낙찰자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4월 이후 신규 발주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중심제와 함께 도입된 중평제는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집행일정(계획)

개찰일	공사명	추정가격(억원)	발주기관(수요기관)	구분	비고
5.31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357	조달청(거제시)	고난이도	지역의무 40% 이상
5.31	부산항 신항 용동(2단계) 준설도 투기장 복토공사	386	조달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	-
6.02	시흥은계 B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1090	LH	일반	-
6.03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861	조달청(인천시)	고난이도	지역의무 49% 이상
6.10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428	조달청(춘천시)	일반	지역의무 40% 이상
6.14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	940	조달청(부산지방국도관리청)	고난이도	-
6.16	속초교도소 신축공사	314	조달청(법무부)	일반	-
6.20	인천공항공철도 마곡역사 신축공사	390	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	-
6.21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1216	조달청(대전지방국도관리청)	일반	-
6.21	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사	687	조달청(경북도)	고난이도	지역의무 49% 이상
6.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2단계 주설비공사	1588	조달청(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난이도	-
6.22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357	LH	일반	-
7.5	충북혁신도시 B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590	LH	일반	-
7.6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1공구	612	조달청(경기도시공사)	일반	지역의무 49% 이상
7.6	광양 도시계획도로 대로2-27(금광아파트~성황) 개설공사	323	조달청(광양시)	고난이도	지역의무 49% 이상
7.20	울산시 산업로(신당교~경주시계획장공사	335	조달청(울산시)	일반	지역의무 49% 이상

또 한국도로공사와 K-water 등 여타 기업의 중심제 발주도 심사기준 확정 등으로 당분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건설사들로서는 이번 수주전에서 가능한 한 최대

한의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전망이 ‘상고하저’로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한 시장에 대비하려면 안정적인 물량확

보가 시급하다”며 “업체마다 이달부터 이어질 중심제 입찰에서 실적을 쌓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권기자 skbong@

조달청, 12건 개찰 대기

31일 357억 거제 동서연결도로로 스타트

조달청이 집행하는 12건의 중심제 대상 공사를 보면, 절반인 6건은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가 포함된 고난이도 공사다.

우선 조달청은 오는 31일 각각 357억원과 386억원(이상 추정가격) 규모의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부산항 신항 용동(2단계) 준설도 투기장 복토공사 개찰로 포문을 연다. 이 중 경남 거제시 수요의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는 고난이도 공사이면서, 애초 중평제 대상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40% 이상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어 내달 3일에도 고난이도 공사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공사 개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정가 861억원 규모인 이 공사 역시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로, 지역의무비율은 49% 이상이다.

내달 10일과 14일에는 춘천시 수요의 춘천시청사 건립공사와 국토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수요의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공사 입찰이 각각 집행된다. 추정가 428억원 규모의 춘천시청사 건립공사는 지역의무 40% 이상이며, 940억원 규모의 옥률~대룡 도로공사는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대상 고난이도 공사다.

또 16일에는 법무부 수요의 일반공사인 속초교도소 신축공사 입찰이 집행된다. 이 공사는 314억원 규모다.

조달청은 이어 21일에는 고난이도 대상인 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사와 일반공사인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수요의 단산~부석사 도로공사는 687억원 규모로 지역의무 49% 이상이 적용되며,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수요의 보령~부여 도로공사는 1216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하루 뒤 22일에는 상반기 최대 규모 중심제 공사로 꼽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개찰이 예정돼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의 이 공사는 추정가 1588억원에 달하는 고난이도 공사로, 6개 안팎 대형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이어 7월6일 지역의무 49% 이상이 각각 적용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1공구)와 광양 도시계획도로 대로2-27(금광아파트~성황) 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

홍승권기자